

정책현안자료 2007-09

# 우리나라 및 외국의 불평등 및 빈곤 동향

김 미 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목 차

I. 사용자료 및 정의 .....	1
II. 분석결과 .....	2
제1절 불평등 동향 .....	2
제2절 빈곤 동향 .....	6

## I. 사용자료 및 정의1)

□ 사용자료: LIS(Luxembourg INcome Study), 통계청 가계소비실태자료(1996,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2003)

- LIS는 OECD를 중심으로 총 29개국<sup>2)</sup>의 가구 및 개인별 소득과 지출에 관한 변수로 구성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비영리기구. 2007년 2월 현재 각 국가별로 최소 1개부터 최대 10개까지의 시점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놓고 있음. 1980년 이전의 historical database를 포함하여 Wave I(1980년)부터 대체로 5년 간격으로 현재 Wave V(2000년 전후)까지 구축되어 있음.
- 통계청에서 실시한 가구소비실태조사는 도시가계조사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1인 가구와 16개 시도별 자료의 범위를 포함하여 가구소득 분포 및 소비수준, 가구 내구재 보유현황과 저축, 부채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계실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조사주기는 5년임(통계청, <http://www.nso.go.kr>). 단, 소득파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1996년에는 농가가 조사에서 제외되었으며, 2000년에는 농어가 조사에 포함은 되어 있으나 배포시에 이들 가구를 제외하였음. 그 결과 분석에 사용되는 실제 표본가구 수는 1996년 24,290가구, 2000년 27,001가구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생활실태조사는 최저생계비 계층과 차상위계층의 실태파악을 위해 2004년에 4월에 실시되었음. 소득은 2003년 1년간의 연간소득으로 조사되었음. 여기에서는 1인 가구와 농어를 포함한 전국 대표가구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가구의 가구소득 분포 및 소비수준, 저축, 부채, 생활수준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계실태를 파악하였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구소비실태조사와의 조사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를 제외한 23,222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함<sup>3)4)</sup>.

1) 본 자료는 여유진·김미곤 외, 빈곤과 불평등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을 재정리하였음.

2) OECD 회원국이 23개국, 비회원국이 6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LIS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3) 농어의 조작적 정의는 통계청의 방식대로 1. 경지면적 10ha(약 300평)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2. 농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여 연간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획득하는 가구, 3. 판매목적으로 1년에 1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정의하였다. 최종 조사가구 중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외된 가구는 전체 표본의 약 8.7%였다.

4) 이와 같은 표준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불일치로 인해 비교가능성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표준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1999년과 2000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3년의 국민생활실태조사 간에는 표본추출과 조사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둘째,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가처분소득 계산 시 소득세 대신 직접세를 감해 줌으로써 소득이 약간 과소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사업소득의 경우도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3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는 총수입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의되는 반면,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의 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으로 정의되고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세 연도의 분석결과를 완전히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연도의 자료 모두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을 통해 표본이 확보되었고, 표준화과정을 거치는 등 자료 간의 일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따라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개념적·조작적 정의

— 소득: 경상소득 및 가처분 소득(외국과의 비교에서)을 기준으로 분석

— 가구균등화지수:  $Y^* = Y_i/\sqrt{s_i}$

여기에서  $Y_i$ 는  $i$ 가구의 소득,  $s_i$ 는  $i$ 가구의 가구원수,  $Y^*$ 는  $i$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다.

## II. 분석결과

### 제1절 불평등 동향

#### 1. 우리나라의 불평등 동향

##### 가. 분배수를 이용한 불평등 추이

— 1996년과 2000년을 기준으로 소득점유율을 이용해 불평등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음.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1996년에 4.29배에서 2000년에는 6.01배로, 다시 2003년에는 6.6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상소득기준으로 1996년 2, 3, 4분위의 합계 소득점유율은 53.86%에서 2000년에는 51.31%로 감소하였다가 2003년에는 52.98%로 다시 약간 증가하였음. 그러나 1분위, 즉 하위 20%의 소득점유율은 1996년 8.72%에서 2000년 6.94%로 2003년에는 다시 6.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소득점유율에서의 이러한 변화경향은 좀 더 장기적인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음.

<표 1> 우리나라의 소득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배)

구분	경상소득					
	1/5분위	2/5분위	3/5분위	4/5분위	5/5분위	5분위배율 <sup>1)</sup>
1996	8.72	13.69	17.99	22.18	37.41	4.29
2000	6.94	12.39	16.77	22.15	41.74	6.01
2003	6.17	12.28	17.23	23.47	40.84	6.62
구분	가처분소득					
	1/5분위	2/5분위	3/5분위	4/5분위	5/5분위	5분위배율
1996	8.60	13.96	17.82	22.77	36.85	4.28
2000	6.96	12.54	16.88	22.09	41.53	5.97
2003	6.25	12.49	17.27	23.43	40.56	6.49

주: 1) 5/5분위 점유율과 1/5분위의 비율을 말함.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 다음으로 10분위소득(Percentile)을 이용해 소득불평등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10%(P10)의 평균소득은 1996년 529천원, 2000년 481천원, 2003년 467천원으로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비해,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중간 10%(P50)의 평균소득은 1996년 1,010천원에서 2000년 1,089천원으로 미미한 감소를 보이다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3년에는 1,223천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상위 10%(P90)의 소득은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1996년 1,847천원에서, 2000년 2,139천원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2,504천원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P90/10의 배율에서도 경상소득 기준으로 1996년 3.49배에서 2000년 4.45배로, 2003년에는 5.36배로 계속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역시 P90/50과 P50/10에서도 전체적으로 분배수준이 악화되고 있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볼 경우에도 분배불평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2000년과 2003년 사이에는 앞의 점유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히려 분배수준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표 2> 우리나라의 10분위소득 변화 추이

(단위: 천원, 배)

구분	경상소득					
	P10	P50	P90	P90/10	P90/50	P50/10
1996	529	1,010	1,847	3.49	1.83	1.91
2000	481	1,089	2,139	4.45	1.96	2.26
2003	467	1,223	2,504	5.36	2.05	2.62
구분	가처분소득					
	P10	P50	P90	P90/10	P90/50	P50/10
1996	508	973	1,766	3.47	1.81	1.91
2000	460	1,027	1,987	4.32	1.93	2.23
2003	437	1,129	2,291	5.25	2.03	2.58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 나. 각종 불평등지수에 의한 추이

-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 등의 불평등지수를 사용하여 불평등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음. 앳킨슨지수의 경우에는  $\epsilon=0.5$ ,  $\epsilon=1.0$ 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음. 먼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6년 0.2787에서 2000년에는 0.3317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음. 이는 1998년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분배의 악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앳킨슨지수들의 변화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즉 전체적으로 1996년과 2000년 사이에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음을 지수들이 설명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2000년과 2003년 사이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증가추이는 다소 줄어든 것을 발견할 수 있음.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간의 차이를 살펴볼 경우 경상소득에 비해 가처분소득의 분배불평등이 다소 감소되고 있음.

〈표 3〉 불평등지수를 이용한 불평등 변화 추이

구분	경상소득		
	지니계수	엡킨슨 지수 <sub>(ε=0.5)</sub>	엡킨슨 지수 <sub>(ε=1)</sub>
1996	0.2787	0.0654	0.1288
2000	0.3317	0.0941	0.1824
2003	0.3410	0.0996	0.2073
구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엡킨슨 지수 <sub>(ε=0.5)</sub>	엡킨슨 지수 <sub>(ε=1)</sub>
1996	0.2778	0.0657	0.1313
2000	0.3269	0.0920	0.1793
2003	0.3367	0.0981	0.2065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 2. 외국과의 비교

- 외국의 불평등에 대한 분석자료는 LIS의 자료를 기초로 빈곤동향의 분석과 동일하게 11개 국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음. LIS에서 사용한 자료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균등화지수는 가구원수에 제곱근을 사용하는 OECD 균등화지수를 이용하고 있음.
- 전체적인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보면, 지난 70~80년대와 90년대 후반의 경우 네덜란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의 지니계수가 높아지거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선진국의 경우 70~80년대의 복지국가모형에서 90년대 들어 세계화를 통한 노동시장유연화, 신자유주의에 의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적 지출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표 4>의 국가별 불평등 추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특히 1990년대 후반에 불평등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예컨대, 노르웨이의 경우 1995년 0.238이던 지니계수가 2000년에는 0.251로 악화되었으며, 스웨덴의 경우도 같은 시기에 지니계수가 0.221에서 0.252로 악화되었음. 스웨덴의 경우 상위 10분위 대비 하위 10분위의 비율이 1995년 2.61배에서 2000년 2.96배로 증가하여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지니계수나 10분위배율은 여전히 OECD 국가들, 특히 자유주의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조합주의 유형의 국가로 분류되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 1990년대 중반의 불평등도 악화가 두드러짐. 독일의 경우 1989년 0.257이던 지니계수가 1994년 0.272로 악화되었으나 2000년에는 다시 0.264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탈리아의 경우도 1991년 0.290이던 지니계수가 1995년에는 0.338로 크게 악화되었다가 2000년에는 0.333으로 약간 낮아졌음. 스페인 역시 1990년 0.303이던 지니계수가 1995년 0.353으로 크게 높아졌다가

2000년 0.340으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스페인의 경우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비율이 1990년 3.96에서 1995년 5.10으로 크게 높아져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 있겠으나, 주요하게는 1990년대 정점에 달했던 유럽대륙 국가들의 고실업과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스템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음. 독일의 경우, 이러한 원인과 함께 독일 통일의 후유증도 하나의 요인인 것으로 보임.

〈표 4〉 국가별 불평등 변화 추이

구분	연도	지니계수	엡킨슨지수 ( $\epsilon=0.5$ )	엡킨슨지수 ( $\epsilon=1.0$ )	P90/10	P90/50
네덜란드	1991	0.266	0.065	0.141	3.02	1.73
	1994	0.253	0.057	0.126	3.07	1.71
	1999	0.248	0.055	0.120	2.98	1.67
노르웨이	1991	0.231	0.047	0.095	2.79	1.58
	1995	0.238	0.052	0.104	2.83	1.57
	2000	0.251	0.059	0.117	2.80	1.59
스웨덴	1992	0.229	0.047	0.102	2.78	1.59
	1995	0.221	0.047	0.104	2.61	1.56
	2000	0.252	0.056	0.112	2.96	1.68
독일	1989	0.257	0.058	0.118	2.99	1.73
	1994	0.272	0.064	0.128	3.39	1.82
	2000	0.264	0.059	0.119	3.29	1.77
이탈리아	1991	0.290	0.069	0.135	3.76	1.85
	1995	0.338	0.097	0.195	4.65	2.00
	2000	0.333	0.093	0.183	4.48	1.99
스페인	1990	0.303	0.076	0.149	3.96	1.97
	1995	0.353	0.106	0.217	5.10	2.23
	2000	0.340	0.096	0.189	4.78	2.09
캐나다	1991	0.281	0.066	0.134	3.78	1.82
	1994	0.284	0.067	0.136	3.87	1.85
	2000	0.302	0.078	0.158	3.95	1.88
영국	1991	0.336	0.094	0.186	4.67	2.06
	1995	0.344	0.100	0.204	4.57	2.10
	1999	0.345	0.100	0.197	4.59	2.15
미국	1991	0.338	0.096	0.201	5.65	2.04
	1994	0.355	0.105	0.214	5.85	2.15
	2000	0.368	0.115	0.224	5.45	2.10
멕시코	1992	0.485	0.192	0.348	10.72	3.12
	1996	0.477	0.185	0.333	9.26	3.11
	2000	0.491	0.196	0.353	10.38	3.31
대만	1991	0.271	0.060	0.114	3.35	1.89
	1995	0.277	0.062	0.119	3.38	1.89
	2000	0.296	0.072	0.139	3.81	1.96
한국	1996	0.278	0.066	0.131	3.47	1.81
	2000	0.327	0.092	0.179	4.32	1.93
	2003	0.337	0.098	0.207	5.25	2.03

자료: LIS(<http://www.lisproject.org/keyfigures/ineqtable.htm>)

- 다음으로, 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 미국, 캐나다의 경우 전체적인 불평등도는 사민주의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조합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었음. 특히, 이 기간 동안 자유주의 국가들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빈곤이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불평등은 여타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미국의 경우 1991년 0.338이던 지니계수가 1994년에는 0.355로, 다시 2000년에는 0.368로 지속적인 큰 폭의 악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비율로 볼 때, 미국은 이 시기 동안 5.65배→5.85배→5.45배로 나타나 소득의 분화가 중하위계층보다는 상위계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마지막으로, 멕시코와 대만의 경우 앞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1990년대 들어 분배수준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멕시코의 경우 전체적 불평등의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비율도 1992년 10.72배, 1996년 9.26배, 2000년 10.38배로 매우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소수의 식민지 지배계층과 다수의 농업원주민으로 구성된 남미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비해, 대만의 경우 사민주의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불평등도를 보이고 있으나, 1990년대 이래로 차츰 불평등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유사한 기간 동안 가장 불평등이 많이 증가한 나라 중 하나였음. 1996년의 지니계수는 대만, 독일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과 2003년의 지니계수는 각각 0.327과 0.337로 크게 높아졌음. 특히, 상위 10% 대비 하위 10% 소득계층을 대비한 결과는 동 기간 중 3.47→4.32→5.25배로 크게 높아져서, 전체적인 불평등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상하위계층의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03년의 P90/10은 멕시코,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 요컨대, 불평등의 절대적 수준에 있어서 멕시코가 가장 높았으며, 대체적으로는 자유주의 국가가 그 뒤를 이었으며,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불평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음.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1990년 이래 불평등도가 악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불평등도가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기재를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제2절 빈곤 동향

### 1. 우리나라의 빈곤 동향

#### 가. 빈곤율

- 먼저, 빈곤의 양적 측면을 보여주는 빈곤율을 기준으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관점에서

각각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임(표 5 참조). 특히, 외환위기를 경험한 직후인 2000년의 빈곤율은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 기준 모두 1996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경상소득 기준으로 절대빈곤율은 1996년 3.1%에서 2000년에는 8.2%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으로 각각 측정한 상대빈곤율 역시 4.6%→8.1%, 9.0%→13.3%, 14.6%→19.4%로 약 4~5%p 정도 크게 증가하였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빈곤율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이처럼 빈곤의 양적 규모는 절대적 관점뿐만 아니라 상대적 관점에서 모두 큰 폭의 증가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증가와 소득감소 등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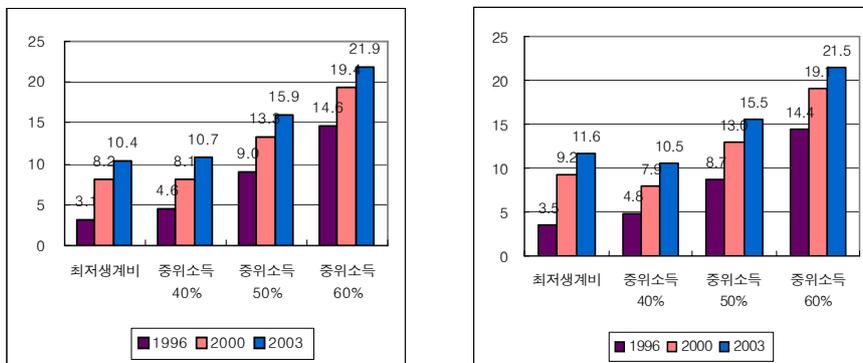
〈표 5〉 우리나라의 빈곤율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경상소득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996	3.1	4.6	9.0	14.6
2000	8.2	8.1	13.3	19.4
2003	10.4	10.7	15.9	21.9
구 분	가처분소득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996	3.5	4.8	8.7	14.4
2000	9.2	7.9	13.0	19.1
2003	11.6	10.5	15.5	21.5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그림 1] 우리나라의 빈곤율 변화 추이



<경상소득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 1999년 이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나 경기가 회복되고 빈곤의 증가경향도 다소 둔화되었으나, 2000년 이후 빈곤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여전히 빈곤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절대빈곤에 비해 상대빈곤의 증가경향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경상소득 기준으로 2003년의 절대빈곤율은 2000년에 비해 2.2%p 증가한 10.4%로 나타나 증가율은 1996년과 2000년에 비해 크게 낮아졌음.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2.6%p 증가하여 10.7%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의 50%와 60% 기준으로는 각각 약 2.5%p 높아져 15.9%와 21.9%를 나타냈음. 이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절대빈곤의 증가폭이 더 컸었던 외환위기 전후에 비해 상대빈곤의 증가경향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우리 사회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절대빈곤 규모의 증가는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비정규직 증가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와 이로 인한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인해 상대빈곤의 관점에서 빈곤의 규모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함.

#### 나. 센지수

— 이러한 경향은 빈곤의 양적 규모를 보여주는 빈곤율과 빈곤심도를 의미하는 소득갭 비율, 그리고 빈곤층 내부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까지 고려하고 있는 빈곤지수인 센지수의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센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빈곤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996년부터 2003년 사이의 센지수 변화 추이는,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의 관점에서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산출한 결과에서 모두 동일하게 급격한 증가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표 6〉 우리나라의 센지수 변화 추이

(단위: %)

구 분	경상소득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996	0.0107	0.0197	0.0353	0.0567
2000	0.0326	0.0377	0.0602	0.0879
2003	0.0467	0.0558	0.0816	0.1115
구 분	가처분소득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60%
1996	0.0151	0.0219	0.0369	0.0582
2000	0.0377	0.0371	0.0591	0.0863
2003	0.0543	0.0557	0.0805	0.10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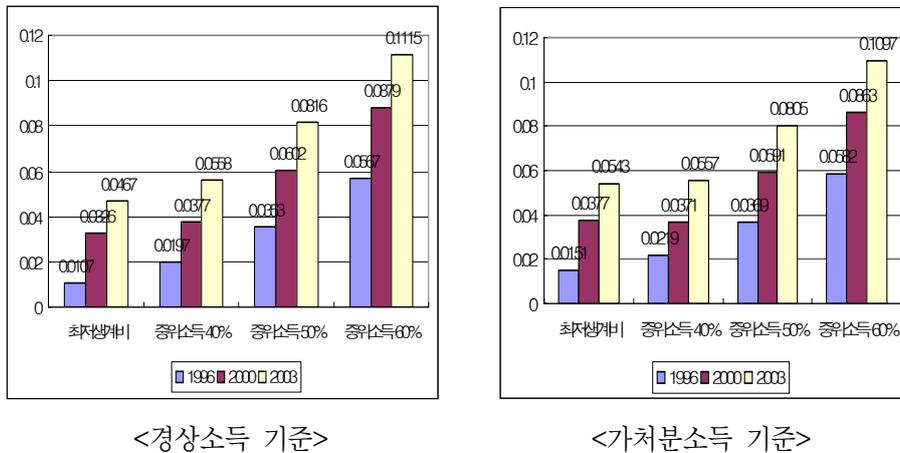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 1996·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 2003.

5) 예컨대, 김유선(2003)에 따르면, 2002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2001년과 비교할 때, 비정규직은 737만명(임금노동자의 55.7%)에서 772만명(56.6%)으로 36만명(0.9%) 증가했고, 정규직은 585만명(44.3%)에서 591만명(43.4%)으로 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임금 100만원 이하 정규직은 119만명(20.2%), 비정규직은 539만명(69.7%). 또한, OECD 기준 저임금계층 663만명(전체 노동자의 48.6%)으로, 이 중 정규직이 122만명(5명중 1명), 비정규직 541만명(10명중 7명)이었다. 2002년 8월 법정 최저임금 2,100원 미달자 64만명 중 62만명이 비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의 증가와 임금양극화 등에 대해서는 김유선(2003), 전병유(2002), 정진호(2004) 등을 참조하시오.

-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절대빈곤의 관점에서 1996년 0.0107로 매우 낮았던 센지수가 2003년에는 0.0467까지 크게 증가. 또한, 상대빈곤의 관점에서도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으로 각각 1996년에 0.0197, 0.0353, 0.0567에서 2003년에는 0.0558, 0.0816, 0.1115로 2배 가까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변화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도 유사하게 나타남. 빈곤율과 소득갭 비율의 변화경향을 고려할 때 빈곤의 양과 심도, 그리고 빈곤층 내부의 분배상태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빈곤상태가 지난 10여년 동안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 우리나라의 센지수 변화 추이



## 2. 외국과의 비교

- 여기서는 LIS 데이터 원자료를 바탕으로 복지국가 유형(사민주의, 조합주의, 자유주의, 유사경제수준국가)에 따라 각각 3개국씩 선정하여 총 12개 국가를 대상으로 1990년대 초반, 1990년대 중반, 2000년 전후까지 빈곤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의 1996~2003년 빈곤 동향과 비교하였다. 국가간 비교를 위해 활용한 빈곤율 등 다양한 빈곤지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상대빈곤의 관점에서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음.

### 가. 빈곤율

- 빈곤의 양적 규모를 보여주는 빈곤율을 기준으로 각국의 빈곤 동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살펴본 빈곤 동향의 전반적인 특징은 사민주의 복지국가 유형에 속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유럽대륙 조합주의 국가모형인 독일이 가장 낮은 수준의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사경제수준 국가로 분류한 대만의 경우가 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또한, 조합주의 국가 중 남부유럽 국가모형에 해당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이들 국가들보다 빈곤율이 낮았으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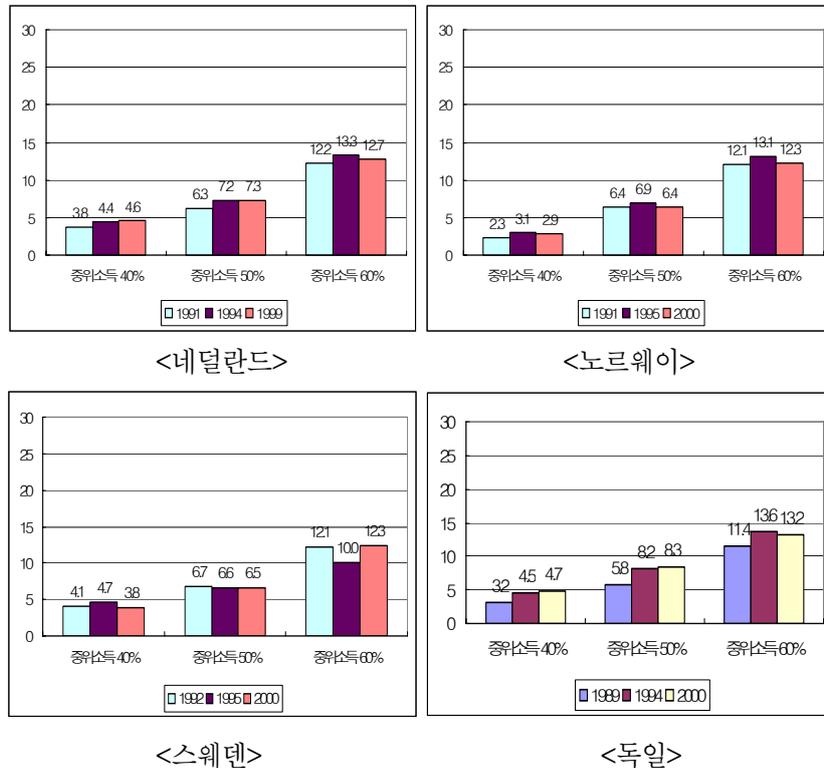
여 2000년 이후에는 이들 국가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한편,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해당하는 3개국 중 미국의 경우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 멕시코와 함께 빈곤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었으며, 영국과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낮게 나타났음.

-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각국의 빈곤동향을 살펴보면, 먼저 대표적인 사민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1992년 4.1%에서 1995년 4.7%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0년 3.8%로 다시 낮아졌으며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는 약 6.5%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는 1995년 10.0%에 비해 다소 높아져 2000년에는 12.3%까지 증가하였음. 노르웨이의 경우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는 2000년 2.9%로 스웨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중위소득의 50%와 60%를 기준으로는 비슷한 빈곤수준을 보이고 있음. 또한, 90년대 중반까지 빈곤수준이 다소 높아졌으나 2000년에는 다시 90년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음.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40%와 50%를 기준으로 90년대 초부터 빈곤율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60% 기준으로는 90년대 후반 들어 다시 낮아졌음.
- 조합주의 국가인 독일의 경우, 통일 이전인 1989년에 비해 1990년대 초반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후 증가경향은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3.2%에서 2000년 4.7%로 상승하였으며,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는 지난 10여 년간 5.8%에서 8.3%로 빈곤율이 상승하였다.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994년 13.6%에서 2000년에는 13.2%로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이탈리아 역시 전반적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빈곤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에는 빈곤수준이 점차 개선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4.5%에서 8.5%까지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이후 7.3%까지 감소하였으며, 중위소득의 50%와 60%를 기준으로도 각각 10.4%→14.1%→12.7%, 19.1%→21.2%→19.9%로 비슷한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음. 반면, 스페인은 90년대 후반에도 계속해서 빈곤율이 상승하여 중위소득의 50%와 60%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약 4%p의 빈곤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인 영국과 미국은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1990년대 이전 빈곤수준이 급격히 높아졌던 것과 달리 1990년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미국은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군에 해당할 정도로 영국보다 빈곤수준이 월등히 높지만 1990년대 들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12.1%→10.8%, 중위소득의 50%와 60%를 기준으로도 18.1%→17.0%, 24.3%→23.8%로 낮아지고 있음. 영국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각각 6.7%→5.8%, 14.6%→12.4%, 22.8%→21.2%로 약간씩 감소하였음. 그러나 영국은 미국과 비교할 경우 절대빈곤 수준에 가까운 중위소득의 40% 기준의 빈곤율에서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중위소득의 60%에서는 1999년에 21.2%로 미국과 2.6%p에 불과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영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경우에도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하면 빈곤율이 낮지만 중위소득의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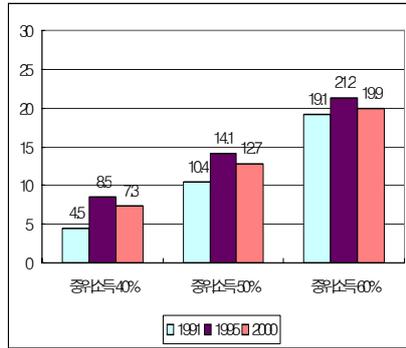
기준으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음. 캐나다의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빈곤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 다소 높아졌지만 뚜렷한 변화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음.

- OECD 회원국 중 후발국가인 멕시코는 비교대상 국가 중 가장 빈곤수준이 높으며, 1990년대 초반 빈곤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후반 들어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으로 각각 살펴보면 14.9%→15.4%, 20.6%→21.5%, 26.3%→28.1%로 오히려 상승하였음. 동아시아 국가를 대표하는 대만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1990년대 이후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대만의 경우, 빈곤수준이 가장 낮은 스웨덴과 견줄 정도로 1990년대 초반까지 빈곤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중위소득의 40~60% 기준의 빈곤율 변화를 살펴보면 각각 2.3%→4.5%, 6.5%→9.1%, 12.5%→15.7%로 상승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분석대상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는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가장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며 급격히 상승하여 멕시코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으로 빈곤 규모가 확대되었음.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빈곤동향을 주요국가와 비교결과를 통해 빈곤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빈곤수준 자체도 매우 높은 국가군에 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절대적 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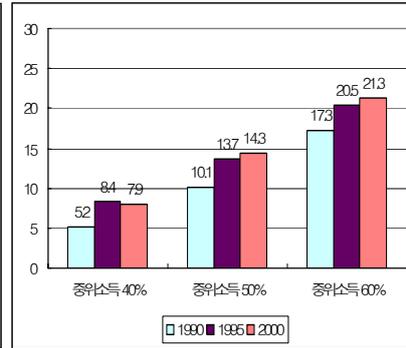
[그림 3] 국가별 상대빈곤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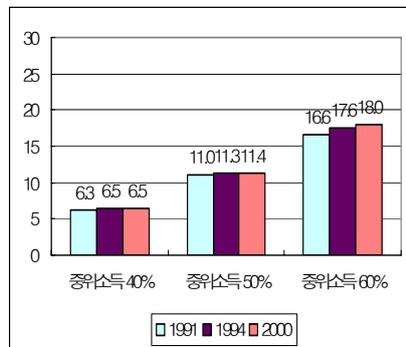
[그림 3-4]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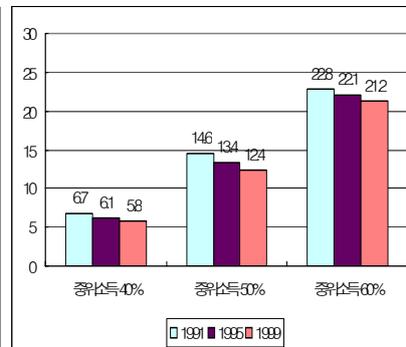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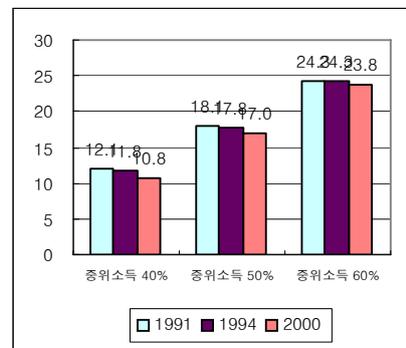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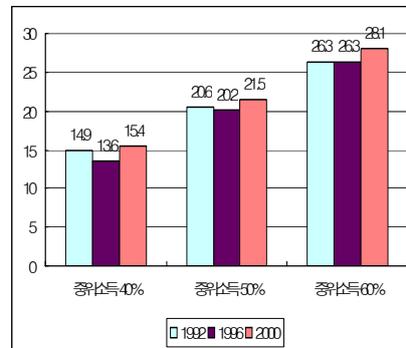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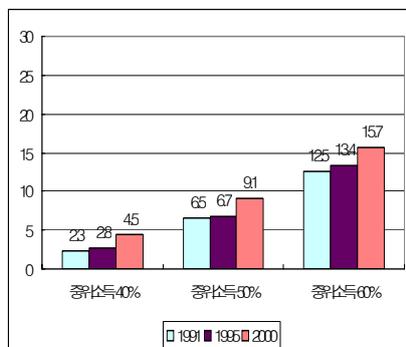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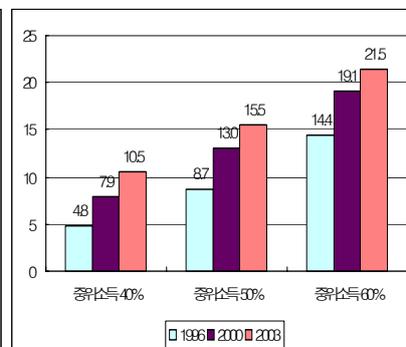
<미국>



<멕시코>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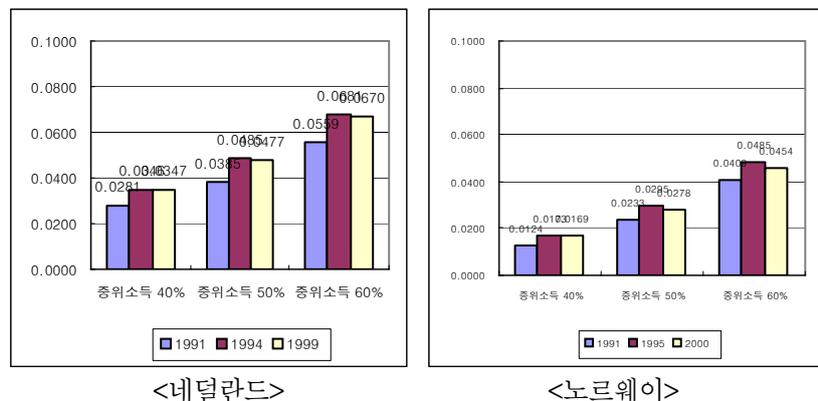
<한국>

## 나. 센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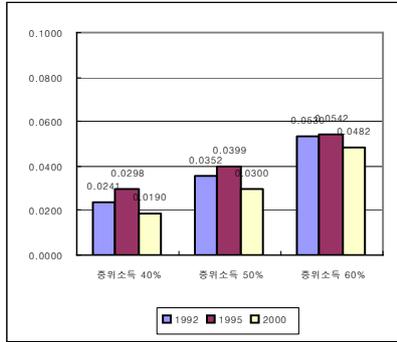
- 빈곤의 양적 측면과 심도 측면, 그리고 빈곤층의 분배상태까지 반영하고 있는 센지수를 기준으로 각국의 빈곤동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살펴본 센지수 변화 동향의 전반적인 특징은 앞서 살펴본 빈곤율과 소득갭 비율의 변화 동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스웨덴, 독일, 대만이 센지수가 낮은 국가군에 해당하며 이탈리아와 영국이 중간 그룹, 미국과 멕시코가 가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음. 우리나라는 센지수가 크게 상승하여 중간 정도의 국가군에서 점차 높은 국가군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가별 센지수의 변화경향을 살펴보면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이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다소 증가하였다가 1990년대 후반부에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1990년대 초반의 증가경향을 가져온 것은 독일의 경우가 주로 빈곤의 양적 규모의 확대에 기인한 것이었던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빈곤의 질적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 빈곤율과 소득갭 비율 모두 다소 감소하여 센지수 역시 약간 낮아지고 있으나 변화폭은 매우 작았다. 멕시코 역시 빈곤율과 소득갭 비율의 변화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1990년대 중반 약간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대만과 우리나라는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대만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데, 대만은 1990년대 초 센지수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므로 크게 증가한 2000년 이후에도 스웨덴이나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전이던 1996년 당시 이미 대만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멕시코와 미국 다음으로 높은 국가로 상승하였음.
- 구체적으로 1990년대 이후 국가별 빈곤상태의 종합적인 변화를 센지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1992년 0.0241에서 1995년 0.0298로 90년대 전반부에 다소 상승하였으나 2000년에는 0.0190으로 이전보다 더 낮아졌으며 중위소득의 50%와 60%를 기준으로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역시 스웨덴과 유사한 변화경향을 나타내고 있지만, 스웨덴과 달리 감소폭이 작아 90년대 초반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 조합주의 국가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경우에도 1990년대 초반 센지수가 크게 상승하였다가 1990년대 후반부에는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독일의 경우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0.0169→0.0213→0.0196, 0.0266→0.0349→0.0336, 0.0475→0.0545→0.0530으로 변화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산출된 센지수는 0.0171→0.0427→0.0353, 0.0349→0.0667→0.0570, 0.0632→0.0970→0.0860으로 변화되었음.

- 자유주의 복지국가인 영국은 앞서 살펴본 국가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2000년대 들어 1990년대 초반 수준을 회복하며 오히려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0.0288→0.0360→0.0293, 0.0529→0.0582→0.0498, 0.0863→0.0894→0.0806으로 변화되었음. 반면에, 캐나다는 90년대 중반까지 센지수가 감소하였으나 그 후 증가하여 2000년에는 90년대 초반보다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40~60%를 기준으로 0.0582→0.0565→0.0511, 0.0877→0.0858→0.0794, 0.1210→0.1192→0.1127로 변화되어 모두 약간씩 감소하였으나 절대적인 수준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멕시코는 빈곤율, 소득갭비율과 함께 센지수 역시 가장 악화된 국가로서 1990년대 초반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대만과 우리나라는 빈곤율, 소득갭 비율과 마찬가지로 증가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빈곤의 양적 규모와 질적 측면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대만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 비교대상 국가 중 센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였으며 중위소득의 40~60% 기준으로 0.0065→0.0087→0.0160, 0.0175→0.0208→0.0317, 0.0364→0.0420→0.0552로 상승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1996년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센지수가 약 2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중위소득의 40~60% 기준으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각각 0.0200→0.0371→0.0557, 0.0354→0.0591→0.0805, 0.0566→0.0863→0.1097로 상승하였음.
- 이처럼 센지수를 기준으로 주요국가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빈곤동향은 빈곤의 양적 규모뿐만 아니라 빈곤의 심도 측면에서 동시에 증가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빈곤 국가군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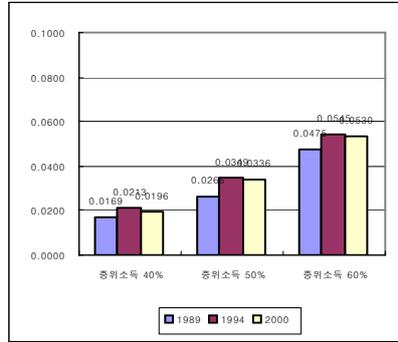
[그림 4] 국가별 센지수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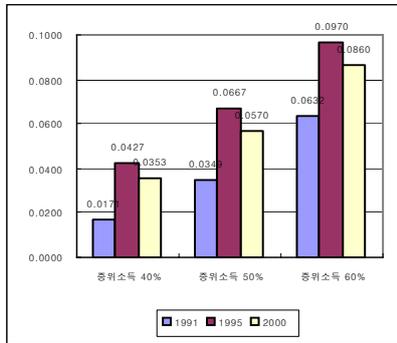
[그림 4]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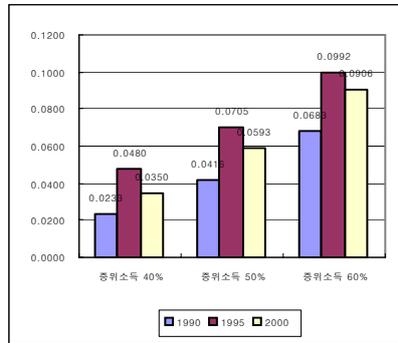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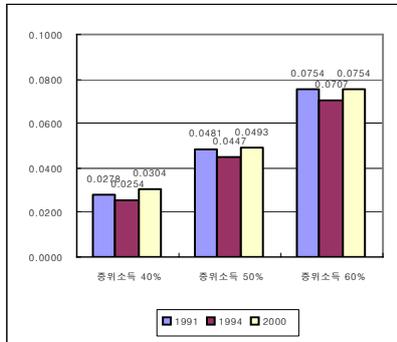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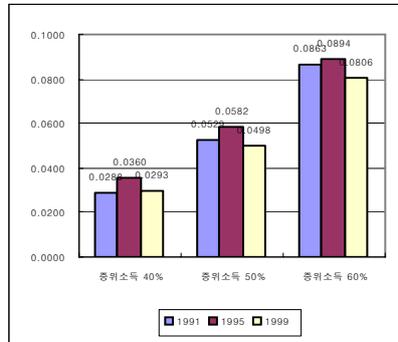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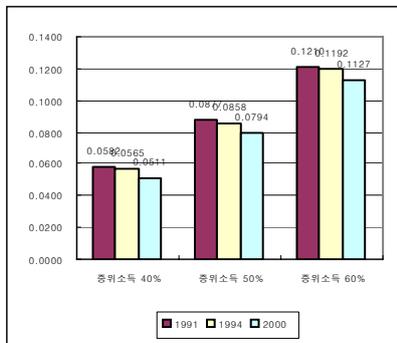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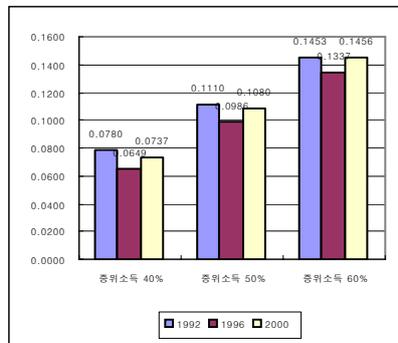
<캐나다>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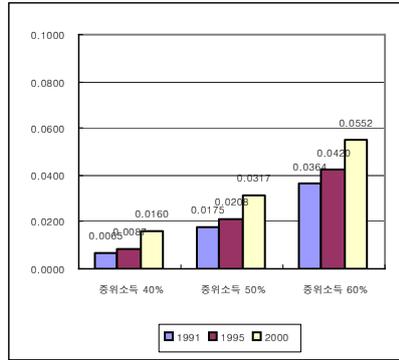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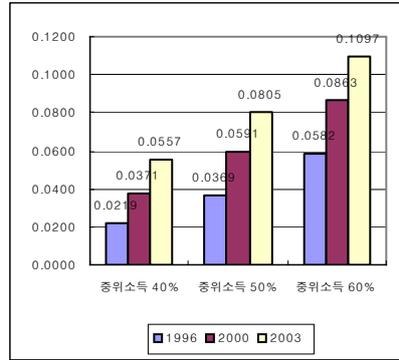


<멕시코>

[그림 4] 계속



<대만>



<한국>